

2024년 5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프로그램명	편성시간	편성시간 변경
바로보는TV 옴부즈맨	본방송 매주 일요일 03:50~04:20 (재방송 매주 월 00:30~01:00)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 프로그램 제목과 평가원 진술 주제를 3줄 이내로 기술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임윤주	5/5	[출발600]"선입견 없이 평등하게 재판"...시각장애인 관사의 하루 [라이브투데이]"같은 정보 반복기입 그만"...종이 없는 첫 디지털 민원실	
박세진	5/12	[한반도 브리핑]결국 SM-3 도입키로...'한국형 미사일방어'vs '미 체제 편입' [뉴스08]북한 유조선 중국 해역서 포착...정제유 환적했나	
김홍태	5/19	[출발600]'연인 살해' 대학생 오늘 송치...이후 사이코패스 검사 [토요와이드]경찰, 이틀째 '연인살해' 대학생에 프로파일러 투입	
안지연	5/26	[뉴스17]EU, 페북·인스타 '미성년 중독 유발' 조사 착수 [뉴스15]음주·무면허 숨기려다...운전자 바뀌치기 '가중처벌'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임윤주	이화여대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연구소 연구원	2021. 11. 28	-
활동	안지연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2023. 01. 31	-
활동	박세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2023. 05. 31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붙임1]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24 5/5(일)	임윤주	지명 개편에 대해 전한 <일요 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는 2026년 7월 예정된 행정 체제 개편과 함께 방위식 행정지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천은 이미 2018년 남쪽에 위치한 '남구'를, 역사 속 비류백제의 전설을 상징하는 '미추홀구'로 이름을 바꾼 바 있습니다. 이는 동서남북 방위식 지명을 없애고 지역 정체성과 주민 의견을 담은 첫 사례였습니다. 인천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와 영종구라는 이름으로 재편되고, 서구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에 명칭 변경과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명 개편의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의 잔재이자 편주의적 지명 대신 지역의 고유 특성을 담은 이름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현행 지	추후 행정 체제 개편 시 관련 내용 보도하면서 지적하신 내용 반영하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법률로 제정해야 가능하고, 지자체 명칭 변경은 시민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주민 여론조사 등 타당성 여부에 관한 다양한 절차들이 요구됩니다. 본 보도는 인천시의 지명 개편 관련 현황 뿐 아니라, 개편 배경을 명확히 제시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주목할 수 있도록 한 한편, 여론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위 위치를 사용한 지명이 왜 식민 통치의 잔재였는지에 대해 조금 더 덧붙였다면,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 5/12(일)	박세진	최근 들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로 자주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방산 수출입니다.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고, 후주에 장갑차를 수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홍보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협의가 정부의 방산 수출 성과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이슈인데,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덧붙여 보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의 정권 교체 이후 기존 계약에 대한 수정 및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논의 결과는 다른 국가들과의 계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협의가 기존 방산 수출 계약과 향후 유사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미납된 개발 분담금을 우리 정부가 납부해야 하는데 1조 원 규모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점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위 산업 수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단위의 세금이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방산 수출 관련 이슈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외교 안보 대담 등에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별도의 대담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뉴스포커스 등 대담에서 더 깊이 있는 내용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뉴스 포커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이슈를 보다 깊이 있게 다루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4 5/19(일)	김홍태	지난 12일 일요일에는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고의적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민폐 주차'가 반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고, 앞 유리에는 주차 위반 스티커가 잔뜩 붙어있는데요,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가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유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엔 신고를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차량을 신속히 견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이 주차 위반 스티커를 수차례 받자 항의 표시로 입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파트 입주민은 오전 5시부터 막아 놓은 길로 알고 있는데, 오전 중에 해결되긴 했다면서 경찰에게 지적받고 차를 뺀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도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인 남성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 승합차를 세워두고 잠적했다는데요, 약 10시간이 지나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뒤에야 입구를 막은 차량이 압수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차량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차주와의 실랑이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절히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유지 불법 주차 차량도 견인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진전이 없다고 마무리 했습니다. 위 보도는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통행을 방해하는 '민폐 주차'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	추후 유사 사례 보도 시 지적해 주신 내용들 참고해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입주민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큰 불편함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차 문제로 이웃끼리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경찰의 대응 과정과 해결 시간 등을 조금 상세히 설명해 민폐주차의 해결이 쉽지 않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진행이 어려워 나름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짚으면 더 유익한 보도였을 것입니다. 사유지에서의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지만, 아파트 관리 규정의 강화를 통한 해결 방법은 없는지도 한번쯤 짚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는 캠페인이나 자발적 방지 참여도 소개하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p>	
2024 5/26(일)	안지연	<p>지난 21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입주 예정의 신축 아파트에서 다수의 하자 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까지 6개월 내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가 사전점검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는 최근 전남 무안의 한 아파트의 입주 사전 점검에서 무더기로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달 말 입주를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상계단 층간 높이 규격을 맞추기 위해 계단을 몰래 깎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잇단 부실시공 논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미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의 경우엔 벌점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 및 사전방문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는 국토부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문화를 지적했는데요. 사후 대처보</p>	<p>한정된 시간이 있다 보니 다룰 수 있는 내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후 관련 내용을 편성할 때 언급하신 국토부의 사전점검 범위, 부실시공 시 입주 예정자들의 법적 보호 사항 등까지 폭넓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p>

		<p>다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최저가 입찰 및 비용 절감, 공사기간 단축 문화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품질 관련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보도에서는 사전 방문제도 강화와 품질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나서서 어떤 것들을 점검할 것인지를 안내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시선에서 부실시공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를 통해 올바른 건설 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요, 국토부의 사전점검 범위를 덧붙여 주었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더욱 도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보수를 하게 될 경우 입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들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등도 함께 전했다면 입주 전 사전 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p>	
--	--	--	--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임윤주 시청자평가원(24. 05. 05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49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임윤주입니다. 사회적 약자는 신체적·문화적 특징 등 다양한 배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시각 장애인 판사에 대해 보도한 <출발 600>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국내 2호 시각 장애인 판사인 김동현 판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보도 초반, 김 판사의 출근길을 보여주었는데, 그는 점자 블록을 따라 법원을 들어선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본인의 판사실로 익숙하게 향했습니다. 김 판사는 변호사를 준비하던 로스쿨 시절,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었으나, 절망을 딛고 국내 2호 시각 장애인 판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의료 소송을 다루는 재판부에 몸담고 있습니다. 시각 장애 1급인 김 판사는, 모든 기록을 귀로 검토합니다. 한글이나 엑셀 파일 등을 음성 파일로 변환하여 꼼꼼히

듣고, 그 외 시각 자료는 동료들과 소통하며, 실제 이미지와 김 판사가 이해한 내용의 차이를 없애려 노력합니다. 많게는 수천 쪽에 이르는 기록을 듣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는 시각장애인 판사로서 장점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내용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초부터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신설해, 장애인 사건 관계인도 원활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범 단계지만 필요성이 높아지면 전국 법원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법의 날'을 맞아 매우 의미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 판사의 출근길을 보여주는 장면은 현장감이 있었는데요. 익숙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은, 단순히 그가 해당 업무에 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시스템이나 환경이 받쳐준다면 시각 장애인이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선입견을 언급한 부분도,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이 눈이 아닌 귀로만 기록을 검토하고 재판에 임하는 시각 장애인 판사에게 가질 수 있는 선입견을, 오히려 강점으로 소화하여 소개한 점도,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보도 끝에는 장애인 전문 재판부 신설에 대한 언급도 함께 하여, 본 보도가 전하고자 하였던 내용이 더욱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민원실 신설에 대해 보도한 <라이브 투데이>입니다. 디지털 약자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하였는데요,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양식이 필요한데요. 각 서류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반복하여 적는 일은 다소 번거로움을 유발합니다. 직접 인터뷰에 응한 시민 역시 간소화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과 동 민원실에 스마트폰으로 민원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창구 앞에 있는 QR 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민원 접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공무원의 컴퓨터로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는 기본 정보가 저장돼 다시 쓸 필요가 없고, 공무원이 자료를 따로 기입하지 않아도 돼 업무 처리 시간도 단축됩니다. 연간 만들어내는 종이 신청서만 대략 200만 건 정도인데, 이용이 활성화되면 이러한 종이 사용량과 저장 공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인 등 디지털 약자가 이용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청 측은, 도와줄 수 있는 직원이 상주해 있고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을 대비해 종이 서류도 구비해 뒀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국민의 권익과 편리를 위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장 주요하게 내세운 내용 중 하나도, 민원 및 공공 서비스 신청 서류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을 밝히며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디지털 약자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습니다.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보도에서 살펴봤듯, 이제는 민원 접수 분야에서도 디지털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 변화이며, 일견 분명 국민들의 편리함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텐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 보도는, 해당 내용도 함께 언급하여 더욱 완성도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의 가격 인상에 대해 보도한 <뉴스 프라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 유튜브는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 4,9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42.5%나 뛴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 가격이었던면, 사회적 파장을 가져왔을 수준의 인상입니다. 통신 3사의 유튜브 프리미엄 관련 상품,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업체들도 줄줄이 가격을 올렸습니다. '구독'과 '인플레이션'을 합한 '구독플레이션'이란 신조어까지 등장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우회 접속 등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있는 꼼수를 찾는 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승자 한 곳이 시장을 지배하는 업계 특성상, 특정 기업이 수요를 독점하고 가격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이익을 우리 사회에 환원해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적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에 비해 세액이 적다며,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을 추징했지만, 넷플릭스는 조세불복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하고 있습니다. 국내 법인세 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도 언급한 바 있듯, 이제는 TV보다는 유튜브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더 많이 시청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본 보도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40% 이상의 가격 인상은 일반 소비재였을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자의 지적은, 이번 가격 인상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인터뷰에 인용된 전문가가 사람들이 가격 인상에 대해 점점 수용하고 적응해간다고 설명한 부분도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가격 인상을 불러온 산업 독과점 문제만큼이나 일반 시민들의 인식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적 측면, 제도적 측면, 인지적 측면에서 문제점들을 잘 정리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명 개편에 대해 전한 <일요 와이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는 2026년 7월 예고된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방위식 행정지명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천은 이미 2018년 남쪽에 위치한 '남구'를, 역사 속 비류백제의 전설을 상징하는 '미추홀구'로 이름을 바꾼 바 있습니다. 이는 동서남북 방위식 지명을 없애고 지역 정체성과 주민 의견을 담은 첫 사례였습니다. 인천 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와 영종구라는 이름으로 재편되고, 서구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에 명칭 변경과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명 개편의 배경으로,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의 잔재이자 편익주의적 지명 대신 지역의 고유 특성을 담은 이름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변경은 법률로 제정해야 가능하고, 지자체 명칭 변경은 시민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주민 여론조사 등 타당성 여부에 관한 다양한 절차들이 요구됩니다. 본 보도는 인천시의 지명 개편 관련 현황 뿐 아니라, 개편 배경을 명확히 제시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주목할

수 있도록 한 한편, 여론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위 위치를 사용한 지명이 왜 식민 통치의 잔재였는지에 대해 조금 더 덧붙였다면,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영수회담 평가에 대해 전한 <뉴스 프레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4월 29일에 있었던 첫 영수회담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 대해 전했습니다. 기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선임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며, 국민의힘은 협치의 물꼬를 텃다고 강조하면서 만남의 의미를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의 의견 역시 정책위원장과 수석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여 강하게 비판했음을 전했습니다. 정치 뉴스의 특성상 취재원 및 인터뷰 대상자의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거나, 간접 인용을 하면서 신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가 가지는 무게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긴 하나, 한편으로는 보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지적 되어온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 보도는 양측의 입장을 직접 인용하여 여야 양측이 전하고자 하였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된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기사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박세진 시청자평가원(24. 05. 12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650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한주간 보도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박세진입니다. 고조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SM-3, 해상 탄도탄 요격 유도탄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초 도입 논의가 개시된 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으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다룬 한반도 브리핑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일 한반도 브리핑에서는 우리 군이,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위해 SM-3 요격 유도탄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M-3의 SM은 Standard Missile의 약자로 해군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되어 사거리가 비교적 긴 탄도미사일을 고고도인 최대 500킬로미터 상공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SM-3가 도입된다면 적이 발사한 미사일을 중간 단계에서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기사는 일각에서 한발에 200억원에서 300억원에 달하는 SM-3를 굳이 구매할 필요가 있는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그 근거로 최근 북한이 한국 공격용으로 개발한 미사일이 KN-23과 KN-24라는 고체연료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연발 발사식 600밀리미터 초대형 방사포인데 해당 무기는 모두 고도 50킬로미터보다 낮게 날아서 SM-3로는 요격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번 SM-3 도입이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와 괌, 하와이에 주둔하는 미군을 지켜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고,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에 들어가기 위한 수순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이번 도입 결정이

미국 MD체계 편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고, 주변국과의 협업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SM-3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인터뷰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정부의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결정에 대해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좋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양상에 대한 분석을 함께 다루며 도입되는 무기체계의 필요성을 살펴본 점이 돋보였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미사일 대응체계와 관련한 배경지식이 부족한 시청자들에게는 다소 난해한 보도였다고도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미사일 대응체계는 한국형 3축 체계라고 불리는 킬체인, KAMD, KMPR의 3개 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킬체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탐지해 타격하는 것으로 미사일을 쏘기 전에 잡으려는 노력이고, KAMD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약자로 발사된 미사일이 목표를 타격하기 전 요격하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KMPR은 대량응정보복체계로 미사일 발사 원점에 대한 응징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등의 보복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시청자의 경우 이번에 도입이 결정된 SM-3가 미사일 방어시스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혈세의 낭비”라는 부정적 시각을 건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국방부의 발표에 따르면 SM-3는 고각으로 발사되는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효과적이며, 한반도 전쟁 시 증원되는 유엔군 및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 내 기지와 괌, 하와이에 위치한 미군 기지를 방어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요격 시스템의 도입이 표면적으로는 미군을 보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전쟁 억제 및 유사시 증원 전력의 투입 여건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보도에서는 한국형 3축 체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도입되는 무기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에 대한 배경 지식을 함께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들이 정부 결정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6일, 연합뉴스TV는 북한의 유조선이 중국 해역에서 포착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유엔의 제재 이행 감시가 느슨해 진 틈을 타 중국이 비밀리에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공조 관계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이슈인데요, 관련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TV는 미국의소리 VOA를 인용해 북한 소유의 유조선 안산1호가 지난 3일, 중국 닝보-저우산 해역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해당 선박이 발견된 해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불법 유류 환적지역으로 지목한 곳으로 안산1호가 불법 정제유 환적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유엔의 대북결의에 따라 북한에 제공되는 정제유는 연간 50만 배럴 이하여야 하는데 러시아가 지난 3월에만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는 미국 백악관의 발표를 언급

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의 제재 이행 감시체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북한의 숨통을 트워주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제재 이행 감시에 구멍이 난 틈을 노리는 북한을 막기 위해서는 유엔 내 또 다른 감시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국제사회에서 무력 충돌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 북한이 외교적, 경제적 실익 추구를 위해 한반도에서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뉴스TV가 중국의 북한에 대한 유류 지원 이슈를 적시적으로 보도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교역은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군사적 교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연합뉴스TV가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교류에 대한 시의성 있는 보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북한 관련 소식을 전해줄길 기대하겠습니다. 올해 초, 한국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인 2명이 한국형 전투기 KF-21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KF-21의 3차원 설계도 프로그램이자 핵심 기술인 '카티아'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최근 우리 정부에 "당초 합의했던 KF-21 개발 분담금을 내기 어렵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6년,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비용 8조 8천억원의 20%인 1조 7338억원을 2026년까지 단계별로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개발 분담금에 따른 보상으로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 자료를 이전 받고 KF-21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이후 양국 정부의 협상 과정에서 개발분담금은 1조 6천억원 규모로 줄었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예산 부족 등 경제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지급을 미뤄왔는데 지금까지 연체된 규모가 1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해 말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 분담금 총액의 3분의 1 정도인 6천억원만 납부하고, 그만큼 KF-21 관련 기술도 적게 넘겨받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측과 최종 협의중이라며, 정부가 검토 중이지만 아직 수용 여부에 대해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성과로 자주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방산 수출입니다.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고, 호주에 장갑차를 수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대대적으로 홍보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협의가 정부의 방산 수출 성과를 희석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이슈인데요,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덧붙여 보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폴란드의 정권 교체 이후 기존 계약에 대한 수정 및 금융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도네시아와의 논의 결과는 다른 국가들과의 계약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번 협의가 기존 방산 수출 계약과 향후 유사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미납된 개발 분담금을 우리 정부가 납부해야 하는데 1조원 규모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점도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방위 산업 수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재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단위의 세금이 무기체계개발에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포커스>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이슈를 보다 깊이 있게 다뤄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24. 05. 19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51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살해한 20대 대학생에 대해 프로파일러가 동원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지 요청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 1분기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과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간 50% 이상 늘었다는 소식 그리고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고의적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민폐 주차'가 반복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지난 14일 출발600과 지난 11일 토요일이드인데요, 경찰이 이틀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대학생 A씨와 면담을 이어갔으며, 경찰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일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A씨에 대하여, 계획 범행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 한 대형마트에서 흥기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 검거된 A씨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프로파일러 면담을 받았고, 검찰에 넘겨진 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 오후 A씨를 면담하기 위해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약 1시간 30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는데, 전날 첫 면담에 투입된 프로파일러는 A씨에게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 진술을 이끌어내고 진위를 검증하는 등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 검사 여부 등은 진술 분석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0일 출발600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최근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교제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지를 호소했다고 전했습니다. 20대 대학생이 지난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단순한 호기심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고인에 대한 명예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상 털기 등 2차 가해를 중지해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 차관은 "관련 부처 등이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며 마무리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특히 학업이 우수했던 대학생의 살인이라는 점에서 과연 어떠한 범행 동기에서 살인이 이루어졌으며, 범행 당시 심리상태가 어떠한지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짚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하여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사건 해결의 심리적인 측면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앞으로 비슷한 범죄의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해 대비해야 하는데요, 특히 학업만이 강조되는 현 상태에서 인성교육의 방향에 대한 단초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사회적, 개인적 측면 모두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의 호소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가 중요한데요, 여성폭력의 현실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존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인의 예방과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만큼 피해자의 보호 또한 중요하다는 점은 함께 강조될 점입니다. 지난 12일 뉴스17에서는 해외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올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한국 1분기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며, 지난달까지 7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간 영향으로,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최근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평균 2.5%로 한 달 새 0.4%포인트 상승되었습니다. 관심은 지난 16일과 오는 23일 각각 수정 전망을 내놓을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한국은행인데요, 두 기관의 종전 전망치는 각각 2.2%와 2.1%였습니다. 다만, 1분기 성장에 내수 회복이 이어질지는 장담할 수 없어, 걸림돌이 없는 건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KDI는 '5월 경제동향'을 통해 "고금리 기조 등으로 상품소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건설경기를 살펴볼 수 있는 국내 건설 수주액도 1분기 기준 1년 전보다 28% 감소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올라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에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12일 뉴스13에서는,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간 50% 이상 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회 양경숙 의원이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335만 9,590명의 금융기관 대출 규모는 1,112조 7,400억 원이었는데요, 이는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4년 3개월 사이 대출자는 60%, 대출금액은 51%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5조 6,200억 원에서 약 두 배 수준인 31조 3천억 원으로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1분기 GDP 성장률 내용에서는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내수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위 내용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짚을 필요는 있었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률 상승의 원인과 영향을 조금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내수 회복과 관련된 걸림돌과 이의 해결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내수 회복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

니다.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소식이 차츰 계속되고 단합된 노력이 있다면 어렵지 않게 현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란 점도 강조할 부분입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와 연체 문제에 대한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평가정보의 자료는 상세하게 보도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가와 연체가 자영업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을 때 신중하게 고려할 사항도 전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과 이에 따른 환경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 번쯤은 짚을 부분입니다. 지난 12일 일요와이드에서는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고의적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민폐 주차'가 반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고, 앞 유리에는 주차위반 스티커가 잔뜩 붙어있다는데요,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A씨가 차량으로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유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엔 신고를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경찰이 차량을 신속히 견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이 주차위반 스티커를 수차례 받자 항의 표시로 입구를 막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아파트 입주민은 오전 5시부터 막아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전 중에 해결되긴 했다면서 경찰에게 지적받고 차를 뺀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인천에서도 경비원과 실랑이를 벌인 남성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 승합차를 세워두고 잠적했다는데요, 약 10시간이 지나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뒤에야 입구를 막은 차량이 압수됐다고 합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차량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차주와의 실랑이 등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적절히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유지 불법 주차 차량도 견인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의 논의는 진전이 없다고 마무리 했습니다. 위 보도는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통행을 방해하는 '민폐 주차'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가 입주민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큰 불편함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주차 문제로 이웃끼리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경찰의 대응 과정과 해결 시간 등을 조금 상세히 설명해 민폐주차의 해결이 쉽지 않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진행이 어려워 나름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짚으면 더 유익한 보도였을 것입니다. 사유지에서의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지만, 아파트 관리 규정의 강화를 통한 해결 방법은 없는지도 한 번쯤 짚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입주민들의 준법 정신을 고취시키는 캠페인이나 자발적 방지 참여도 소개하면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 **안지연 시청자평가원(24. 05. 26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652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소셜미디어가 보여주는 무한한 매력으로 이용자들은 쉽게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소셜딜레마'라는 다큐멘터리에서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 소셜미디어에 더욱 의존하도록 조종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어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연합뉴스 TV에서는 지난 17일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에서는 유럽연합이 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고 전했습니다. EU 행정부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16일 두 플랫폼의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여부를 평가하는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며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대상 기업은 전 세계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덧붙였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다보면 자신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콘텐츠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알고리즘에 의해 개인 맞춤형 콘텐츠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편향된 시각을 부추기고 중독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보도는 두 플랫폼의 어떤 특성이 중독 유발의 가능성으로 지적된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EU에서 위반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 디지털서비스법에 대한 설명도 제공되지 않아 아쉽다고 평가됩니다. 추후 관련 내용을 보도할 때에는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바라보는 국내외의 시각을 함께 전달한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달 9일 발생한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시작으로 음주운전과 관련된 처벌을 다루는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매니저의 허위 자수와 음주 여부를 숨기기 위해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하는 등 음주 운전 의혹을 무마시키기 위한 행동들이 이어져 관련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지난 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인 추가 음주로 사고 입증을 어렵게 해 사고를 숨기려는 꼼수가 교묘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음주 등을 감추려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숨기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쉽게 적발되어 대부분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를 교사한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경우에 따라 수사 방해로 간주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초범의 경우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행위자 자체가 이미 범죄 전력이 많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일 경우에는 최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 후 추가 음주를 해 음주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룬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지난 9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도 사고 후 추가 음주

의 정황이 확인되어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도에서는 지난 2019년, 술에 취해 화물차를 몰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A씨의 사고 후 소주 1병에 음료 1캔을 섞어 마셔 경찰은 의도적 추가 음주로 의심하고 사고 두 달 뒤 같은 조건으로 음주를 측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의 측정 결과와 0.054%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의 추가 음주 전혈중알코올농도로 보고 기소했고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한 의도적 추가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는데, 처벌 규정의 공백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 사고 의심자가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면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에 처한다는 것으로 법무부는 관계기관 협의 후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도 위협을 줄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동안 이를 규제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보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도 현장에서 적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음주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법적 허점을 악용한 범죄 사례들이 빈번하게 등장해 우리 사회에서는 모방 범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유명 연예인의 사건을 통해 그동안의 유사 사건과 그 처벌 내용 등을 전달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우리 사회에서 관련 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전에는 예비 입주자가 현장에 방문해 하자 등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 과정에서 콘크리트 균열과 누수 등 많은 하자가 발생해 새 보금자리를 보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방문했다가 실망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입주 예정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뉴스프라임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입주 예정의 신축 아파트에서 다수의 하자과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까지 6개월 내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가 사전점검에 나서게 된 배경으로는 최근 전남 무안의 한 아파트의 입주 사전점검에서 무더기로 하자가 발견되었고 이달 말 입주를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상계단 층간 높이 규격을 맞추기 위해 계단을 몰래 깎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잇단 부실시공 논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경미한 하자에 대해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의 경우엔 벌점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 및 사전방문 제도를 강화할 것이라는 국토부의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문화를 지적했는데, 사후 대처보다는 건설업계에 만연한 최저가 입찰 및 비용 절감, 공사기간 단축 문화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품질 관련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보도에서는 사전 방문제도 강화와 품질 및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 입주 예정자들의 우려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나서서 어떤 것들을 점검할 것인지 를 안내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시선에서 부실 시공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를 통해 올바른 건설 문화 정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국토부의 사전점검 범위를 덧붙여 주었다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더욱 도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실 시공 등으로 인해 보수를 하게 될 경우 입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들은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등도 함께 전했다면 입주 전 사전 점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 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채 제도가 폐지되고 수시 채용으로 전환되는 등 채용 환 경의 변화와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청년층의 일자리는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는데, 22일 오후 1시 뉴스에서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다섯 분기 연속 청년층의 임금근로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의 내용을 인용해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 수는 제작년 같은 기간보다 29만 3천 개가 늘어, 일곱 분기 연속 증가 폭이 둔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대 이하의 임금 일자리는 9만 7천개로 3.6% 줄었으나 60대 이상의 임금 일자리는 24만 9천개로 28.4%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노동 시장 에서의 청년층과 고령층 일자리 수의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금근로 일 자리 수는 증가했지만 가장 활발히 일해야 할 청년층의 일자리라는 내리막 길을 걷고 있 는 것입니다. 이 보도는 단순히 통계 결과만을 전달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결과에 대한 분석적 내용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데 수치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고령층 일자리에 증가에 대한 보도는 정규직보다는 임시직 증가세가 두드러진 다는 내용이 전해졌는데, 추후 관련 보도를 할 때에는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일 자리 정책 상의 한계 등을 짚어보면 더 나은 보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 2024년 5월 5일 04시/ 임윤주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5월 12일 04시/ 박세진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5월 19일 04시/ 김흥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 2024년 5월 26일 04시/ 안지연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